

“尹이 자초한 것…상응하는 판결로 응답해야”

내란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지역사회 반응

시민·노동·5·18단체 “현정질서 유린·최고령 불가피”
재판부에 신속·단호한 판결 촉구…“사면·타협 없어야”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령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남 서을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

후 약 30년 만이다. 광주시민단체들은 선고를 앞둔 재판부를 향해 “현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 가장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송창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하면, 현행 법치 체제에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은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조차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사형이 구형되는 상황에서도 웃음을 보이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국민 법 감정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며 “이는 현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시민들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로, 중형 선고를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재판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만든 권력자에 대한 사형 구형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단”이라며 “재판부 역시 그 무게에 상응하는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용웅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사건”이라며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반에 공포와 통제를 강요한 행위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5·18 단체들도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양재혁 5·18민주유족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어떤 예외나 예

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두환·노태우씨 선고 사례처럼 극형을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타협이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명예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며 “계엄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가장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역사 앞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19일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사법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뜰 07:41 일몰 04:50
하계 17:43 일몰 14:18



미세먼지	악화当中예요!
광주	비
목포	비
여수	비
제주	비
전남	비
전북	비
경주	비
목포	밀물 (고) 12:11 / 23:44 썰물 (저) 04:42 / 18:07
여수	밀물 (고) 07:36 / 19:07 썰물 (저) 00:18 / 13:46

누범기간에 또…절도범 실형

만년필 ○…누범기간에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25일 경남 창녕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 옷장 속 손가방에 보관돼 있던 현금 2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1년, 2022년(징역 1년 6개월), 2024년(징역 2년 10개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아구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크로스백에 금품을 담아 택시로 주한 수법이 과거 범행과 유사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노조 관계자는 “직업성 질병 산재에 내리는 건설현장은 여전하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 산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건설현장 직업성 질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15일 열고, 2차 집단 산재 신청을 공식 추진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화순 운주사 찾은 관광객들 14일 전남 화순 운주사(雲珠寺)를 찾은 관광객들이 신비로움을 간직한 천불천탑 사이를 걸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신라 말 도선국사가 세운 것으로 알려진 천불 천탑 운주사(雲珠寺)는 9층 석탑(보물 제796호), 석조불감(보물 제797호), 원형다층석탑(보물 제798호), 와불 등 총 108기의 석불과 21기의 석탑이 있다.

광주약사회, 대형마트 ‘창고형 약국’ 우려

롯데쇼핑에 간담회 공식 요청

광주시약사회가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안에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광주시약사회는 14일 롯데쇼핑 등에 공문을 보내 입점 계획 재검토를 전제로 한 간담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공공제”라며 “특히 대형 유통시설 내 대량·저가·무제한 선택 방식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창고형 약국’ 모델은 구조적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약물 부작용 등을 증폭시켜 여러 지역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지역사회와 의료·보건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창고형

약국 모델을 도입하려는 것은 단순 점포 운영 문제가 아닌 지역 보건 안전과 공공 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립이나 비난을 위한 자리가 아닌 의약품 안전과 지역사회 보건 체계, 대형 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사 의사결정 책임자와의 공식 간담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트 측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 입점과 관련해 겟포 중인 것은 맞다. 단,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최근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 1곳이 개설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약품을 미리 공급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건설노동자 8명 전원 인정…오늘 2차 신청 예고

광주·전남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근골격계질환 집단신재가 전국 최초로 노동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1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집단신재 신청 결과 노동자 8명 전원이 산재 승인 판정을 받았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9월23일 건설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집단 신재를 신청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첫승인 결정을 내린 뒤 순차 심의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했다.

집단 신재 신청 이후 최초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52일로 정부가 제시한 질병 산재 평균 처리 기간(288일)과 단축 목표(120일)에 비해 크게 앞당겨진 결과다.

노조는 이번 집단신재 승인에 대해 개별 노동자들이 직업성 질병을 입증하는 구조에서 노동당국이 집단적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중요 계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사례만으로 현장의 현실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건설업종에서 1

만385명의 직업성질병 산재가 발생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전체 3055명과 비교할 때 7330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산업 전체의 직업성질병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4.9%에서 2025년 42.1%로 폭증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업성 질병 산재에 내리는 건설현장은 여전하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 산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건설현장 직업성 질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15일 열고, 2차 집단 산재 신청을 공식 추진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안전 파수꾼’ 의용소방대원 모집 어렵네

광주·전남 4년 연속 줄어…고령화·청년 감소 영향
“전문성 갖춘 민간과 협력해 현장 대응 능력 높여야”

광주·전남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

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신규 유입은 줄고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현장 대응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광주·전남의 용소방대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1만2290명(광주 1244명·전남 1만1046명)이던 대원 수는 2022년 1만 2200명, 2023년 1만 2113명, 2024년 1만 1725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만 1427명(광주 1274명·전남 1만 1539명)까

지 감소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소방 협력 조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의용소방대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소방 관련 자격·경력·보유자·의료·구조 전문 자격 보유자 등을 대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령 기준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이

다. 문제는 이 같은 정년 규정이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는 점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정년 도달 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전남 지역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겹쳐며 의용소방대원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를 막기 위해 기존

단위 지역대를 중심으로 조직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시 지역과 달리 농어촌은 청년층 자체가 부족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크다”며 “정년이 65세

로 제한되다 보니 숙련된 대원의 현장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실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모집·교육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고령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통적인 모집·교육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의용소방대 중심의 대응 체계에 대해 중장비 운용, 드론, 수색·구조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회나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제42회 전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제42회 전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지난해 11월 담양군 축성경기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군 의용소방대 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